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6년도 제24차 회의

1. 일 자 2006년 11월 23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재)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사 박 재 환 부총재보
김 수 명 부총재보 이 영 균 부총재보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 장 병 화 금융시장국장
이 광 주 국제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장 세 근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44호 —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안)>

- (1) 담당 부총재보가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여

신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예금지급준비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 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예금지급준비제도가 과거에 비해 기능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본원통화 공급구조가 경직적인 여건하에서는 과잉유동성을 일정 부분 흡수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제반 유동성조절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금융기관의 과도한 여신공급이 지속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지준을 엄격히 관리하되 콜금리 운용목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 및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라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콜금리가 목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시장금리 안정 및 콜금리 목표 준수를 위해 자금을 공급하게 되면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지급준비율 인상의 효과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콜금리 목표제 운영상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한편, 앞의 다른 일부 위원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기타예금의 지급준비율을 7%로 상향 조정하는 근거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기관의 일평균 초과지준규모를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은 예금 이외에도 금융채 발행 등을 통해 영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행태에 따라 지준율 인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금융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지준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금융채에 대한 지준제도 적용은 근거법령의 미비 등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할 문제로 본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지준율 인상시 예상되는 통화승수 변동 및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 변화정도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준율을 인상하

게 되면 현금통화비율 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통화승수 변동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지준율 인상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다소 가파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정도는 금융기관 및 시장의 반응정도에 달려있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금번 지준율 인상으로 인해 금리 및 자금수급 등에 있어 다소의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책당국으로서 이를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상적인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과거와 같이 통화량 목표제하에서는 본원통화와 통화지표는 일정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현재의 콜금리 운용목표제하에서는 목표 콜금리와 시장금리, 통화지표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처럼 지준율 변화가 통화승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금번 지준율 인상이 통화증가율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함

<붙임: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안)>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06년 11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 -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 참조)